

이 자료는 2013년 3월 28일(목)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3. 3. 2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경제상황 평가	1
1. 민생경제 여건	
2. 재정 여건	
3. 2013년 경제전망	
II.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6
III. 2013년 주요 정책과제	7
1. 일자리 창출	
2. 민생 안정	
3. 경제 민주화	
4. 리스크 관리 강화	
IV. 경제정책 추진기반 마련	14
1. 재정기반 확충	
2. 협업체계 강화	
〈참 고〉 향후 실행 계획 〈100일 주요 추진과제〉	18

I. 경제상황 평가

1. 민생경제 여건

① (경기둔화 장기화)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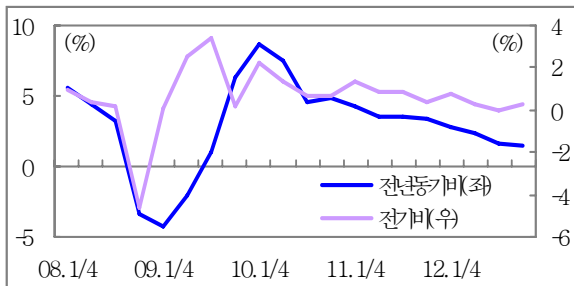
□ 수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

* 통관 수출(전년동기비, %): ('12.3/4)△5.7 (4/4)△0.3 ('13.1/4^e)0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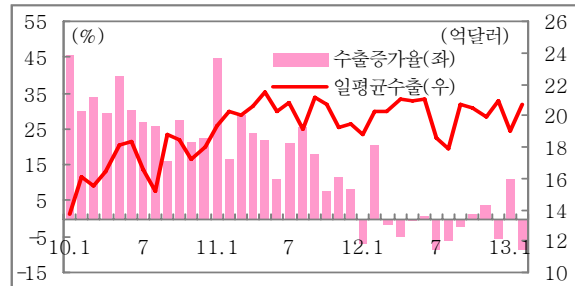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약한 회복,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움

* 美 채무한도 조정유예 만료(5.19일), 이태리 정국 불안과 위기 전염 가능성, 美·日 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세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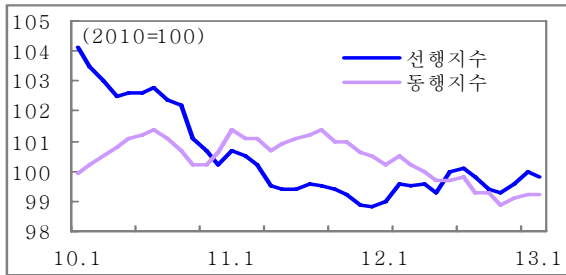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기비, %): ('12.1/4)1.0 (2/4)0.3 (3/4)1.2 (4/4)0.4 ('13.1월)△2.0

○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수요부진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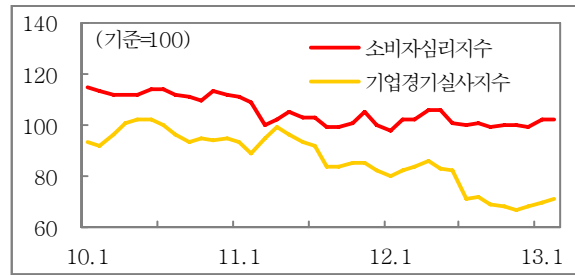
* 설비투자(전기비, %): (12.2/4)△5.0 (3/4)△6.8 (4/4)0.8 ('13.1월)△6.5

- 경기동행 · 선행지수가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소비 · 기업심리 등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

경기동행 · 선행지수 추이



소비 · 기업심리지수 추이



-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도 부담

-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고점 대비 5.2% 하락했으며 '12년 주택매매거래량은 '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주택매매거래량(만건): ('10)80.0 ('11)98.1 ('12)73.5 (1212월)10.8 ('13.1월)2.7 (2월)4.7

- 건설투자도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10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

* 건설투자(%): ('09)3.4 ('10)△3.7 ('11)△4.7 ('12)△2.2

② (서민생활 어려움) 서민층의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반듯한 일자리도 찾기 어려우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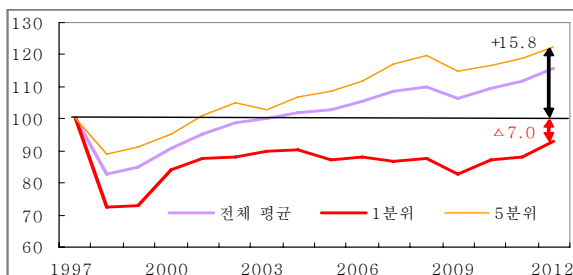
- 중산층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

* 중산층 비중(중위소득 50~150%, %): ('06)64.6 ('08)63.1 ('10)64.2 ('1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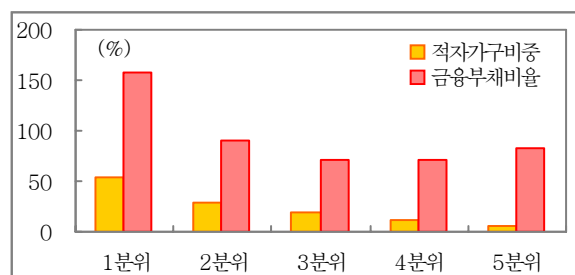
* 지니계수(%): ('06)0.306 ('08)0.314 ('10)0.310 ('11)0.311

- 저소득층의 경우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

분위별 가계 실질소득('97=100)



분위별 적자가구/부채비율('12)



□ 고용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취약

- 취업자 증가세도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2.10)40 (11)35 (12)28 ('13.1)32 (2)20

- 자영업·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부문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

* 자영업자/비정규직 비중(%,'11): (한국) 28.2/34.2 (OECD평균) 16.1/12.0

* 취업자 증감(만명, '12): (도소매)5.1 (음식숙박)5.3 (운수보관)4.8 (제조업)1.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도 크게 상승하여 생계비 부담이 가중

최근 3년간('10~'12) 주요품목 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9.4	23.9	28.7	12.0	1.3	7.0

- 금년 들어서도 소비자물가지표는 1%대이나, 신선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

* 소비자물가/신선식품물가(전년동월비, %): ('13.1)1.5/9.3 (2)1.4/7.4

③ (리스크 요인 잠재)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 잠재

□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리스크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말대비, %): ('08)8.7 ('09)7.3 ('10)8.7 ('11)8.1 ('12)5.2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10말)0.61 ('11말)0.67 ('12말)0.81

□ 주택시장은 중장기 수요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지적 불안 요인 등 하방위험이 상존

□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초래할 우려

*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12.11)△0.6 (12)3.9 ('13.1)△1.9 (2)1.5 (3.1~27)△2.1

* 외국인 채권순매수(조원): ('12.11)3.4 (12)6.0 ('13.1)0.1 (2)6.1 (3.1~27)3.8

2. 재정 여건

【지출 여건】

-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의 경기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
 -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등 지출소요 증가
- 향후 5년간 재정에서 국정과제 달성 지원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이 필요
 - * 공약 이행 등을 위해 '13~'17년간 135조원 이상의 지출 소요 예상

【세입 여건】

-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입여건 재점검 결과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 예상
 - (국세수입) 정부 예산안 제출('12.9월) 당시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 발생
 - * '12년 성장률 : ('13예산 정부안 편성전제) 3.3% → (잠정추계) 2.0%
 - '13년 성장률 : ('13예산 정부안 편성전제) 4.0% → (전망) 2%대
 - (세외수입) 주식매각 관련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이 예상
 - * 공기업지분매각('13년 예산, 조원): (산은) 2.6, (기은) 5.1
- 세계잉여금(0.3조원) 등 세입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지출·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으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부담 예상

3. 2013년 경제전망

- ① (고 용)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 보다 낮은 연간 25만명 증가
 - 고용률은 15세 이상 기준 59.4%, 15~64세 기준 64.6% 예상
- ② (성 장)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 성장
- ③ (물 가)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시 당초 전망(2.7%)보다 낮은 2.3% 상승
 - 다만,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 석유류·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
- ④ (경상수지) 당초 전망보다 다소 축소된 290억불 흑자 예상

< 2013년 경제전망 >

	2012년	2013년	
		(당초)	(수정)
▪ 취업자 증감(만명)	44	32	25
고용률(% , 15세이상)	59.4	59.5	59.4
고용률(% , 15~64세)	64.2	64.7	64.6
▪ 경제성장률(%)	2.0	3.0	2.3
▪ 소비자물가(%)	2.2	2.7	2.3
▪ 경상수지(억달러)	431	300	290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

Ⅱ.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 2013년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뒷받침
 - (일자리 창출)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친화적 제도개선·창조경제 기반 구축
 - (민생안정) 물가 안정, 서민금융·주거·교육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구현을 통해 민생안정 기틀 마련
 - (경제민주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적 약자 보호시스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 (리스크 관리 강화) 대내외 여건 변화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 체계와 위험요인별 관리를 더욱 강화
- ◇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책 실행체계 마련



Ⅲ. 2013년 주요 정책과제

1 일자리 창출

- ◇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내수·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여건 조성
-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 중심 경제시스템 구축
- ◇ 창의성과 과학·IT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가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1.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 ① (재정정책)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를 초과 달성하고 추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
 -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4월)
 - 경기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편성
 -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 확대
- ② (금융정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 * 中企 정책금융은 상반기에 조기집행(60%)하고 추가 확대 검토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립(3.29일)·하우스푸어 지원대책 마련
 -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지원 확대(3.5→4.0조원)
- ③ (환율정책) 주요국 양적완화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하여 시장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 완화 등 시장안정노력 지속
 - 선진국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G20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국제공조 강화

2. 내수 ·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조성

- ① (내수 활성화) 투자 · 소비 활력을 통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
 -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5월)
 - * 입지 · 인력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중고설비교체 자금지원 등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만제 확대 외투법인(외인지분 50% 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의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5월)
 - 중소 근로자 지원, 최저임금 수준 합리화 등 서민 소득기반 확충
- ② (수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 강화
 - 수출금융을 상반기 조기집행(60%)하고 중소기업 지재권분쟁 역량 제고
 -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4월)
 - '서비스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9월)하고 해외관광객 행정편의 제공
 -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분기별)하여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4월)
- ③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 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 * 규제정상화, 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조속 발표 (4월초)

3.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 ① (일자리 중심 정책운영) 일자리 관점에서 주요 정책 · 사업 추진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5월)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 등을 통해 추진실적 수시 점검
 -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 · 집행에 적극 활용하고 고용창출 · 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 마련
- ② (고용확충 기반 강화) 공공 일자리, 창직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 근로여건 개선 등 고용친화적 제도개선 추진
 -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기관 채용규모(1.5 →1.6만명)를 금년중 확대하고 지자체-대학-기업간 연계를 활용한 창직 확대 유도
 - 임신 · 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편 등을 추진 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마련(6월)
 - 민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

4. 창조경제 기반 마련

①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 조성

○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6월)

i) (창업단계)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 시범 조성
- 클라우드 펀딩 도입 등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ii) (회수단계) 초기 투자자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을 신설

iii) (재도전 단계) 연대보증 등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

-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

②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여 창의성 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

*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 등

○ IT 활용, R&D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5월)

○ 창조형 서비스업의 핵심역량인 창의적 인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

*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 등

** R&D 예산 중 서비스 R&D 비중(%): ('13)0.5%(16.9조원 중 0.1조원) →('14)1%수준

○ 고용창출투자, 中企 투자세액공제, 中企 창업지원 등 업종별 조세특례제도에 창조형 서비스업을 추가

○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 감면

○ MICE 산업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창조형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 수출과 동일한 금융*·세제지원 추진

* MICE·관광 등 '국내에서 발생(외화기득)한 서비스수출에 대해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

2 | 민생 안정

◇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1. 물가 안정

- ①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에 주력
 - 품목별 물가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
 - * 소비자단체 원가분석기능 강화, 유치원비·보육료 등 물가조사 추진(13년 총 14개 이상)
 - 민관이 함께 농산물·독과점 품목 등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5월)
 - 석유·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 완화·경쟁 촉진 추진
 - *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폰 시장 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 ② (서민품목 가격안정) 수급관리·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민 부담 완화
 - 농산물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재배·비축 등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은 산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검증체계 구축(4월)

2. 서민금융·주거·교육 부담 완화

- ① (서민금융)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체계 개선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고금리 전환대출 확대 추진
 -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5월)
 - *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을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
- ② (주거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 강화
 - * 렌트푸어·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조속 발표(4월초)
- ③ (교육·보육비)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을 실현하고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 경감
 - 부모의 선택에 따라 0~5세 유아학비·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쏠세층으로 확대 (13.3월~)
 -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확대하고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3. 맞춤형 복지 강화

- ① (생활영역별 맞춤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중산층 도약 지원
 - 현행 통합급여를 생계·주거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
 - 차상위 기준 상향(중위소득 50%)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②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일하는 것이 유리한 복지시스템 구축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적용
 -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보험료의 1/3→1/2)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참여자, 차상위까지 확대
- ③ (의료보장성 강화) 국민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 부담완화 추진*
 - * 관련부처·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 구성·검토('13.3월)
 -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대응체계 구축(6월)
- ④ (노후소득 보장) 1인 1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국민행복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 * '14.7월 기초연금 도입의 법률근거 마련('13.3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
- ⑤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 급여 신청·접수, 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 등 통합복지 서비스 수행을 위해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추진
 - *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설치('13.3월 관계부처 T/F 구성, '13.9월 개편안 마련)
 - 부처별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관련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단순·표준화
 - * 관련부처·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3 경제 민주화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소비자등 경제적 약자 보호

①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완화(예: 상당히)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강화
-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고발요청권 부여

②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
- 집중·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③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

- 환율부담 전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징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금지 조항 신설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인정
-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을 단축(1년→2개월 이내)
- 소비자 피해구제·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확대

* 소비자단체지원 등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4 리스크 관리 강화

◇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가계부채 등 부문별 리스크 관리 강화

- 위기 대응을 위한 **Control Tower**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협업체계를 구축
 - * 민·관 합동 시장점검 간담회와 관계기관간 거시경제금융회의 활성화
 -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포착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 * 시장불안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선제 대응
 - 실물·금융·외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 강화

- 가계부채 등 부문별 위험요인의 밀착 모니터링과 선제대응 강화
 - ①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제2금융권 등 취약부분 관리 노력을 지속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감독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
 - ② (부동산시장 정상화) 주택시장 급변동이 거시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강화
 - ③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자본유출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환원
 - ④ (엔저현상 대응) 국내 외환·금융시장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환변동 보험 활성화 등 환위험 관리를 적극 지원
 - ⑤ (기업부채 위험 관리)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

IV. 경제정책 추진기반 마련

1 재정기반 확충

- ◇ 향후 박근혜정부 5년간 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
 - 세입확충(40%, 53조원), 세출절감(60%, 81.5조원)을 통해 소요 재원 조달

1.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약 등 이행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축소·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53조원 수준의 추가 세입 마련
 -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8월)
 - * 기획재정부 2차관(공동위원장), 조세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세출구조 개선

- 예산낭비 제거, 세출 구조조정,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 공약 등의 이행 재원을 확보
 - 공약 이행 등의 재원 마련과 효율적 세출구조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81.5조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 추진
 -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연도별·분야별 구체적 세출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4월말)
 -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15개 부처 기조실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3. 건전재정 기조 확립

- '13~'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건전 재정기조 정착,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등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 제시
 -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
 -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약속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등 마련(4월말)

4. 공공부채·재정위험 관리 강화

-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하고 재정위험지표를 마련하는 등 재정위험 관리 강화
 - 최근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 산출 추진
 - 잠재·우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자산 2조원 미만 高재무위험 기관 등으로 확대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추진)

5. 재정관리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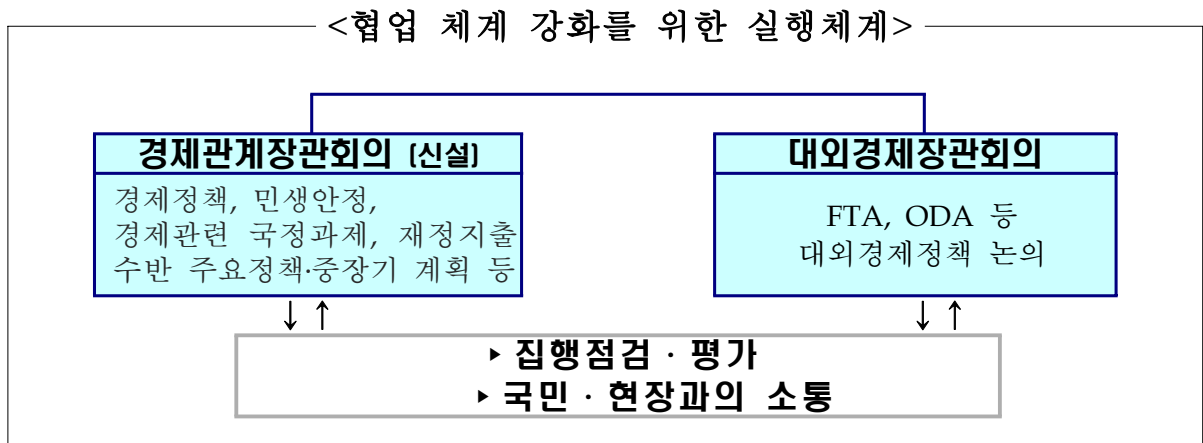
- 재정평가시스템 개선,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공재정사업 사전·사후 평가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조직 통합* 추진
 - * KDI(재정·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조세연구원(자율평가, 성과목표관리, 공공기관 분석지원), 각 출연연구기관(심층평가) 등
 - 국유재산 총괄관리기능 강화, 유상사용 원칙 확대, 유휴·저활용 재산의 매각 활성화·적극 개발 등 수입확충 노력 강화

2 협업체계 강화

◇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 1 (칸막이 없는 경제정책) 현장·점검중심의 운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 수립·실행
 - (협업)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공통의 상황인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문제 해결
 - * 예) 부처간 협업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재정지출·조세지출간의 시너지 제고방안 마련
 - (점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점검·환류 체계화
 - (소통)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
- 2 (실행체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체계 마련
 - (수립) 민생현안, 경제관련 국정과제, 다수 부처 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정책마련
 - (집행·평가) 정책집행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민관 합동 정책 평가 TF를 구성·운영

- Pilot project 시행과 모범사례 확산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땀은말 》

“우리 경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성장 흐름이 장기화되고 반듯한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서민의 금융·주거·교육 부담이 큼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도 밝지 않으며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 온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이 함께 커가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주거부담 등을 완화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4월 주요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임)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 규제정상화·수급 조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 	<p><u>국토부</u> 재정부 금융위 안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추경 추진</u> *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추진 	<p>재정부 전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p>재정부 산업부 중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진흥회의 개최(분기별) *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p>재정부 산업부 중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 * 서비스산업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p>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구축 *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대책 마련 	<p>복지부 재정부 교육부 국토부 문화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지원 확대 관련 고시개정 	<p>고용부 재정부 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사업조정제도 도입 * 적합업종 사업조정 기한 단축 등 	<p>중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EWS 운영 등 	<p>금융위 재정부 농식품부 안행부 산림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하반기) * 각 기관별 증원계획 마련 	<p>재정부 안행부 등</p>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 확대 및 채용여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채용계획 확대(3월), 채용여력 확대방안 마련(3~9월) 등 	재정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 등 고용영향평가제 확대 강화방안 마련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종별 '중소기업공동인력양성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공동관리체제'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등 	재정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 생산공정의 IT 융합화, 제품·공정개선 등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중소벤처 창업과 기술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창업활성화 펀드 조성방안,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등 	미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년 해외건설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등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 약속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 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전략회의 개최 	재정부 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개선 방안,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방안 등 논의 	복지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분야별 세출 구조조정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작업 	재정부 전부처 민간전문가

(2) 5월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지하경제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u>국세청</u> 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투자활성화 TF 구성·운영, 종합대책 발표 	<p style="text-align: center;"><u>재정부</u> 산업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해외관광객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 MICE 관광객 편의지원 방안 마련, 시범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u>법무부</u> 문화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IT기술 기반 융복합 기반 구축 * 산학연 전문가 TF 구성, 기본계획 초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u>미래부</u> 재정부 산업부 교육부 문화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외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합리화,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방안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u>산업부</u> 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국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관리 선진화 * 국유재산 매각활성화방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u>재정부</u> 국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지원: K-MOVE * K-MOVE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 K-MOVE 거버넌스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u>고용부</u> 산업부 외교부 교육부 중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적 일자리 정보망 확충 * 워크넷과 광역자치단체·여가부 등 일자리정보망간 연계 	<p style="text-align: center;"><u>고용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방안 마련 *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기업의 정년연장 유도 	<p style="text-align: center;"><u>고용부</u> 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인프라 지원 *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용역 발주, 사업자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u>재정부</u> 고용부</p>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개선방안 발표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범위 확대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 농산물·독과점 등의 전반적 유통구조 점검·대응 	재정부 농식품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 일자리-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등 	고용부 재정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과 첨단기술 융합형 R&D 활성화 방안 *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IT·NT 등 첨단기술 융합형 R&D 병행 추진 등 	미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서비스 IT활용 촉진, 서비스 R&D 활성화, 창의인력 양성 등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70%달성 위한 일자리 로드맵 수립 * 국민일자리 행복회의 개최·보고 	고용부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고졸자 채용 확대계획 수립 *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실천의지 제고 	재정부

(3) 6월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 달성 * 재정관리점검회의 운영(월1~2회) 	재정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조기 집행 * 신규상품 개발·지원제도 개선 등 	재정부 (수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마련,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논의 	복지부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4대 중독 종합대책 마련 	복지부 재정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관계부처 T/F 구성·운영(4월), 대책 마련 	재정부 복지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방안 등 	복지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채·재정위험 관리 강화 *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확대 등 	재정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마련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고용부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관계기관 협의 	고용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방안 * 한국미래창조펀드 시범 조성 등 	재정부 중기청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형 서비스관련 수출금융 지원 *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등 	문화부 재정부 (수은)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넥스(KONEX) 시장 신설 * 코넥스시장 자문인 선정, 관련 IT 시스템 개발 등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 유통업체의 알뜰폰 시장 진입 유도 등 	미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 봄배추·무 계약재배 추진·마늘 비축계획 수립 	농식품부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위원회 운영 * 집중·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약자 보호 *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및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 등 추진 	공정위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비교정보 제공 및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추진 등 	공정위 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안·강화 추진 등 	공정위 중기청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순환출자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등 	공정위 법무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 M&A 활성화 방안 * M&A 투자펀드 결성, M&A 저해요인 발굴 등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육성대책 마련 * 중소기업 범위·졸업제도 개편 검토, 졸업부담 완화, 글로벌 기업 육성 등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서비스 허브화 추진 * 송도지역을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허브화 	재정부 산업부 복지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통상 로드맵 수립」 마련 * FTA 포함 대외통상의 방향설정 등 	산업부 재정부 외교부

(4) 지속 추진과제

정책 과제 및 실행 계획	협업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마련 *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8월),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제출(9월) 	<p>재정부 전부처 민간전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 * 민관합동 TF 구성·운영(2~9월),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 마련(9월) 	<p>재정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통계청 한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지원 관련 법령 개정 	<p>중기청 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 강화 * 서비스무역장벽 보고서 발간(9월) 등 	<p>산업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연금 도입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3월), 국민행복연금 도입 추진(연내) 	<p>복지부 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 전문가 의견 수렴·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p>재정부 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 	<p>고용부 산업부 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 관계부처 T/F 구성·운영(3월), 대책 마련(9월) 	<p>복지부 재정부 고용부 안행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의 물가 감시 기능 강화(3~12월) * 유치원비·보육료 등 물가조사 추진(‘13년 총 14개) 등 	<p>소비자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 	<p>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계속), 거시건전성 조치 보완, 신규제도 도입 검토 	<p>재정부</p>